

2018

Report

of Trend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8.05. part1 제 97 호

# Contents

## I . 정부 추진동향

-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저성장 · 저출산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 " 3
- 2. 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4

## II . 수도권 추진동향

- 1. 대도시권 규제족쇄 풀어야 국가경쟁력 비상 5
-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6
- 3.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북부 '표심' 들썩 7

## III . 비수도권 ( 지역 ) 추진동향

- 1.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8

## 1.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저성장·저출산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연합뉴스

## 02

## 주요내용

## ■ 지역에서부터 희망 만드는 게 새 정부 균형발전 기본 토대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한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출구전략이 지역에 있다고 강조
  -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이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지역에서부터 희망을 만들고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게 새 정부 균형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 참여정부 등 이전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시정과 격차 해소라는 개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했다면 새 정부는 한국이 가진 여러 어려움을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
  - 변화된 시대요구와 저성장·양극화·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해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필요
  - 4차 계획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 나침반 역할을 하겠음
- 4차 계획은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위와 관계부처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천계획
- 이날 심포지엄은 계획 수립을 앞두고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됨
  -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충북지역사업평가단이 4차 계획의 의의와 방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방방곡곡 생기 도는 균형발전정책,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등을 주제로 발표
-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개회사
  -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과 경남 지역을 언급하고서 지역경제의 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도록 해야 함
  -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공간과 사람이라는 지역혁신 3대 요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
  - 이를 위해 산업부가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기업), 국가 혁신클러스터 조성(공간), 젊은 인재가 모이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사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심포지엄 논의를 바탕으로 19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
- 4차 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43개 실천과제 외에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등도 포함될 예정

## 2. 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mdaily.net

## 02

## 주요내용

### ■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 등 지역성장거점 중심 균형발전전략 마련

####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활동을 개시
- 신암선열광원 국립묘지 승격 (대구), 국가대표 선수촌 개소 (진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재난피해지역 도시재생 지정 (포항),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광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7월 예정, 부산) 등 지역별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마중물을 마련

#### •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를 ‘신지역성장거점’ 으로 육성

-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오는 2020년까지 30% 의무화
- 또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 성공시켰으며 전북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
-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
-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추진으로 개통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단축

#### • 첨단산업 육성·혁신창업공간 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

- 정부는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
- 창업자를 위해서는 저렴한 업무 공간, 창업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등 제공
-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왔던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견·벤처기업·대학의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지역창업허브’ 로 개편
- 경남은 항공국가사업단지, 밀양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 • 도시재생뉴딜 사업, 2022년까지 약 500곳 구도심 활력 회복

- 2022년까지 지역특화재생 100곳, 청년창업공간 50곳,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등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 68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올해 8월까지 총 1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
- 재난피해지역인 포항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 으로 지정됐으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중
- 이와 함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
- 창업육성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
- 특히 지역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터 새로이 사업 (노후건축물 개량사업)’ 을 추진해 창업 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
- 도시재생 관련 예비사회적기업도 250개 이상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

#### •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추진 등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조직을 활성화
- 이에 주민참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등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방침

- 우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등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
- 2020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의 공공임대상가도 조성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확대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

## 1. 대도시권 규제족쇄 풀어야 국가경쟁력 비상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인천일보

## 02

## 주요내용

### ■ 수도권정비·프리존특별법, 기업유치·경제성장 역차별, 개방성 높여 교류·연계강화, 서비스산업·인프라 키워야

-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가 국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음, 여기에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이중 족쇄가 준비중
- 세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 대도시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의제 발굴 및 기초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
  -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음
  - 수도권 인구는 2030년 2618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서울은 1990년 이후 이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인천·경기는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수도권의 GRPD는 2000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3%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경제성장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줌
- 수정법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마저 시동을 걸면서 역차별 논란이 가속되고 있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방의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늘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인천의 8대 전략 산업이 상당수가 겹침
  - 인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기업 유치와 경제 성장이 역차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통과된다면 사실상 '경제 족쇄'가 추가되는 셈

#### ▲ 개방성 높이고 대도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해야

-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 대도시들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차원에서 전략 정책을 추진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구 2348만명과 7740억달러 GRDP 규모는 각각 세계 대도시권에서 인구 5위, GRDP 4위 경쟁력, 이를 인위적인 '규제'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는 것
  - 이를 위해 개방성을 토대로 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
  - 비즈니스 및 관광을 위한 90일 이내 체류시 민간인 비자면제를 확대해 인천국제공항을 아시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
- 인하대 최정철 교수
  - 세계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수록 국가는 발전
  - 규제를 풀고 개방성을 높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함
  -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의 시대에 걸맞은 지역정책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돼야 함

## 2. 지역특구법 개정안' 엇갈리는 여야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 02

## 주요내용

### ■ 국회에 제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 반발하는 가운데 개정안 추진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림

#### •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3 월 15 일 대표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음
-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보조를 맞춰 추진되고 있는 '규제혁신 5 법' 중 하나로 제출된 것
- 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 를 시·도 단위에 추가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
- 또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주요 기업,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역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쟁점 부상

- 이번 개정안은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세제 및 재정지원,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
- 그러나 수도권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수도권 역차별법'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하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 남경필 지사

-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은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하향평준화가 돼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개정안 저지에 나섬

### ■ 여 "수도권 인프라 활용한 균형발전" vs 야 "수도권 역차별 조장" 엇갈리는 여야 주장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 성남 수정 )

- 민주당의 규제완화 4 대 법안 중 3 개 법안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기술 관련 규제 완화 법 3 개가 모두 수도권에 적용된다는 말이라며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 창업과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역특구법만 예외로 만들었다고 설명
-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을 키우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

#### •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 시흥갑 )

- 특정 지역의 배제를 통해 지역 간 역차별과 갈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소위 '갈라치기' 방식의 그릇된 선거공약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 수도권 역시 오랜 기간 과도한 규제의 울가미에 묶여 고통받아 왔다며 지역마다 가진 특화된 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역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 국토에 대한 획기적 규제 완화와 적절한 지원이라는 긍정적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 3.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북부 '표심' 들썩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06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머니투데이

## 02

## 주요내용

■ **판문점 선언 ' 이후 안보 이슈가 지배했던 접경 지역의 표심이 경제 개발 이슈로 질적 변화를 맞을 것이란 전망**

-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포천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당원을 비롯 1700 여명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지지선언
  -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왔음
  - 하지만 제 3 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들 지역이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남북 경제협력에 의한 개발이 기대되면서 안보 일변도의 보수 야당보다 여당으로 표이동이 점차됨
- 포천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내리 3 선을 지낸 지역
  -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인 지역구 특성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며,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 민심을 향한 메시지도 잇따라 내놓음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비롯해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는 동안에도 북한에 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연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음
- 그러나 자유한국당 탈당 당원들은 다른 경기도 신도시들이 성장하는 동안 포천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포천을 맡길 수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
  - 이 같은 비판은 최근 남북 화해 관계가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 등의 경제 개발 이슈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여전히 남북 대치 구도 속 안보 이슈만을 강조하는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
- 경기도 파주에 제 2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 부동산 값 등 이 지역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음
-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등장해 기대감을 더하고 있음
  -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조차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법 추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비무장지대 (DMZ) 안보·관광 특구 지정을 통한 평화생태허브 조성, 통일대한민국 남북교류 전진기지 (일산, 연천) 구축 등을 내세우며 남북 경협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세움
- 여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북부지역을 아예 남북 경협 지대로 만드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와 파주시 등 경기 북부 10 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 로 묶고 경기도지사 권한이 아닌 평화통일특별도지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
  - 이전에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분도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남북 경협을 기회로 개발과 성장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설명
- 이 경우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규제가 제한됐던 수도권 개발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옴
- 여당 한 관계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서 수도권이 제외됐을 때 여당 내에서는 남북 경협이 사실상 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득이 있었다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1. 이채익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01

##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8.05.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1 뉴스

## 02

##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이채익 (울산 남구갑)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

-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지역인재에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 을 추가해 제한적으로 인재풀을 늘리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채용비율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 공공기관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 이 권장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과 이전지역인재 채용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
- 당초 현행법상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방대학에 한정돼 울산 소재 대학졸업자의 고용이 늘어나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울산의 경우 이전공공기관들이 전체채용인원 기준이 아닌 지역본부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맞추는 등의 편법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5% 로 전국 혁신도시 10 곳 중 최하위
- 이에따라 인재채용의 기준을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이채익 의원
  - 일부 공공기관이 남용하는 예외조항의 경우는 법률이 정한 사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할 예정
  - 편법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음